

요약

최근 비급여 진료비 문제는 보건의료정책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관련 제도는 가격 고지·공개·사전 설명·보고 단계로 강화되어 왔음. 정보공개는 핵심 목적은 정보비대칭 완화를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유도 에 있으나, 현재 정보 제공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 정보포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누리집 비급여 진료비 정보’로 이원화되어 있어, 소비자의 접근 편의성이 떨어짐. 향후 양 기관의 비급여 정보를 통합·연계해 소비자 중심 플랫폼으로 개편하고, 실손보험 청구 앱 등 소비자가 주로 사용하는 서비스와 연계할 필요가 있음

○ 비급여 진료비는 과거 건강보험 밖의 자율 영역으로 정부 개입이 제한적이었으나,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 및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 악화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보건의료정책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¹⁾

- 전체 의료비 지출은 2015년 69.7조 원에서 2024년에는 138조 원으로 매년 증가해 왔으며,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비 비율은 전체 의료비의 약 16% 내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그림 1〉 참조)
- 실손 지급분을 제외한 순 본인부담금은 2020~2024년 사이 급여(16조 원 → 20.3조 원)와 비급여(8.5조 원 → 12.9조 원) 모두 약 4.3조 원 증가하였으며, 비급여의 증가율이 급여 증가율을 크게 상회함(〈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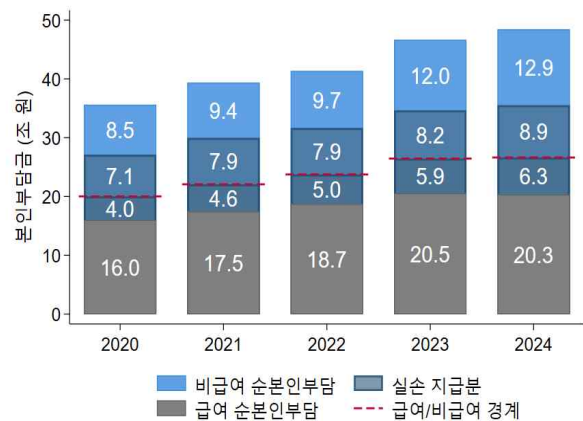
〈그림 1〉 총의료비 지출 구성

(단위: 조 원)



〈그림 2〉 순 본인부담금과 실손 지급분: 급여 vs. 비급여

(단위: 조 원)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보고서』

주: 순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금 중 실손 지급보험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산정함

자료: 금융감독원(2026. 6. 4.), “2025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 자료”; 금융감독원(2021. 4. 28.), “2020년 실손보험 사업실적 및 향후 대응계획”을 재구성함;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보고서』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 5. 22.), “지속가능한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특화분야 강화, 과잉 비급여 관리 등 추진”

○ 이에 비급여 진료비 관련 제도는 고지(2010년) → 공개(2013년) → 사전설명(2021년) → 보고(2023년)의 단계로 강화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관리급여 도입 논의 등 적극적인 관리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음²⁾

- 비급여 관련 제도는 개별 의료기관의 가격 고지에서 출발하여, 의료기관 간 가격 비교, 환자 대상 사전 설명, 정부에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하는 형태로 발전해 왔음
- 특히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별 비급여 가격을 심평원 누리집·건강e음에서 비교할 수 있는 계기가 됨
- 2025년 3월 정부는 「비급여 적정관리 혁신방안」을 통해 과잉 이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체계 신설을 발표하였고,³⁾ 5월에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 논의를 시작함⁴⁾
 - 관리급여는 과잉 이용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를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되(급여화),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음

○ 이 중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는 직접적인 가격·진료기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시장 참여자의 합리적 판단을 돕고 정부의 시장 모니터링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함

- 비급여 정보공개는 핵심 목적은 의료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을 완화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과 공급자의 적정한 가격 설정을 유도함으로써 효율적 자원배분을 지원하는 데 있음⁵⁾
- 실제로 정보공개를 통해 소비자가 비급여 가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공급자 측에서는 시장 평균 대비 과도한 가격 책정을 억제하는 시장규율이 작동할 여건이 조성됨
 - 2025년 가격공개 항목은 물가상승률(2.2%)을 감안하면 공통 항목(571개) 중 평균 금액이 실질 인하된 항목 75.1%(429개)로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됨⁶⁾
- 정부 측면에서는 비급여 가격과 진료내역을 파악함으로써 비급여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과잉 비급여 관리,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건강보험 재정 안정,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그러나 현행 비급여 정보공개 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급여 정보 포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로 나뉘어 운영되면서 정보 제공 주체와 내용이 양 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있음(〈표 1〉 참조)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고제도에 근거해 비급여 정보 포털에서 2025년 기준 1,246개 비급여 항목의 지역 평균·중앙·최저가격 및 가격 편차, 안전성·효과성, 주요 질환·수술별 진료비용 등 비급여 관련 종합 정보를 제공함
 - 2026년 5월 개편에서는 전체 자료 대신 다빈도 제출 가격을 기준으로 한 중앙가격·최저가격을 새롭게 보여주고, 지역별 가격 차이를 색상 명도로 구분하였음⁷⁾
 - 또한 지역·항목별 가격비교 기능과 입원 질병의 진료비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2) 이상영·여나금·이재은·문석준(2021), 『비급여 진료비 확인 제도의 심사 대상 및 범위 연구』, 정책보고서 20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 3. 19.),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

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 5. 8.), "비급여 적정관리 방안 실행 위한 의료계·환자소비자단체·정부 간 협의체 논의시작"

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 9. 3.), "내가 받을 비급여 진료 가격,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 9. 3.), "내가 받을 비급여 진료 가격,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7) 국민건강보험 보도자료(2026. 5. 6.), "『비급여 정보 포털』 이용자 중심 개편...가격 비교부터 입원 질병의 진료비 정보까지 한눈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법 제45조의2에 근거하여 심평원 누리집 및 ‘건강e음’ 모바일 앱을 통해 2025년 기준 693개 비급여 항목의 의료기관별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⁸⁾
 - 공개 대상 항목은 국민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매년 선정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 선택권 강화를 높이고자 함⁹⁾

〈표 1〉 비급여 정보 제공 주체 및 공개 정보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개 채널	비급여 정보 포털	누리집(비급여 진료비 정보) 및 건강e음 앱
출범 시기	2025년 4월(보고 제도 이후)	2013년 1월(공개 제도 이후)
공개 항목	2025년 보고항목 1,251개 중 현재 1,246개	2025년 기준 693개
정보의 단위	지역(시·군·구)별 항목 단위	개별 의료기관(의원)별 항목 단위
정보의 범위	지역 내 평균 비급여 가격 수준, 안전성·효과성 정보, 질환별·수술별 정보, 주요 통계	의료기관별·항목별 비급여 가격(가격 중심)

자료: 건강보험공단 비급여 정보 포털(<https://www.nhis.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ttps://www.hira.or.kr/>)

- 한편, 비급여 정보는 제공 주체와 내용이 분산되어 있어 소비자는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기 어렵고, 의료기관을 비교·선택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실제 활용성이 제한될 수 있음
 - 건강보험공단 비급여 정보 포털에서는 대부분의 비급여 항목을 조회할 수 있으나 지역 단위 통계값만 제공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자가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가격 수준이 지역 평균 대비 높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있어도 정작 어느 의료기관이 더 저렴한지는 알 수 없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별 가격을 제공하지만 공개 항목이 제한적이어서 정작 소비자가 알고자 하는 항목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이처럼 정보가 분산되어 있으면 소비자의 탐색비용이 커지고, 특히 고령층이나 의료정보 이해도가 낮은 소비자는 제도를 알고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비급여 정보 제공체계는 단기적으로 분산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비자가 의료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가 특정 비급여 항목을 검색하면 해당 항목의 정의, 의료기관별 가격, 지역별 가격분포, 안전성·효과성, 관련 질환·수술 정보 등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양 기관 정보를 통합·연계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정보를 통합하더라도 소비자가 포털을 직접 찾아와야 한다면 활용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소비자가 이미 사용 중인 병원 예약·접수 앱, 실손 청구 앱, 알림톡 등과 연계하여 가격 정보가 실제 의료 이용 과정에서 전달되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이때 가격뿐 아니라 향후 실손보험의 비급여 할인·할증 제도와 연계하여 보험료 부담 가능성까지 함께 제시한다면, 소비자는 진료비용과 보험료 영향을 모두 인식한 상태에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음

8)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2025. 9. 4.), “내가 받을 비급여 진료가격,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2026. 3. 23.), “2027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국민 의견으로 정한다”